

광주·무안공항 통합 '군공항 연계' 전남 반발 격화

도의회 전체 의원 명의 성명
“항공정책 부정 자기모순 초래”
사회단체연합 “갈등의 점화선”
시의회 “동반성장·상생 해결”

국토교통부가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전남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광주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별개의 사안인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전체 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2018년 8월 전남도-광주시-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국토부는 이 협약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상의 ‘지자체 간 합의’로 인정하고 최상위 항공 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이렇듯 광주 군공항 이

전 문제와 민간공항 통합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공감하는 부정할 수 없는 상수다”면서 “국토부는 지난 8월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국토부는 6차 종합계획에 전혀 별개의 사안이며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마치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표현해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말았다”며 “6차 종합계획에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연계하지 않아야 하고, 구체적인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사회단체연합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광주시와 반대하는 전남 기초지자체 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



전남사회단체연합회들이 15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을 이루고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공항 통합 문제를 서로 연계한다는 것은 새로운 갈등의 점화선이 될 것이다”며 “국토부는 민간공항 통합 및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갈등 야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며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조속히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과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고, 국토부 안도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사는 이날 도청 e브리핑 후 기자들

과 만나 “과거 정부 3차 항공기본계획, 5차 공항계획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연계하지 않았다”며 “군공항 문제는 어느 지역으로 공식적으로 정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를 무안공항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안공항 발전을 위해 광주 민간공항과 하루속히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 통합과 이전 문제는 동반성장 상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고려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 공항 문제로 인한 논란에 중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더 이상 공항 문제가 양·사·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광주와 전남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 동반성장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임신부 재난지원금 추가 접수

광주시는 16일부터 24일까지 임신부 재난지원금을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임신부들의 정신·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30만원이다. 광주시는 당초 13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출산 혹은 장기간 부재 등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임신부를 위해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1차 공고 대상과 동일하며, 제14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일(9월 2일) 이전부터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2021년 9월 13일)까지 광주시에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시민 중 2020년 10월 9일부터 ‘2021년도 코로나19 임신부 재난지원금’ 1차 마감 신청일(2021년 9월 13일)까지 임신(출산)이 확인되는 임신부다.

신청은 임신부 본인만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광주아이기움 홈페이지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조기철 기자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공청회 ‘파행’

나주시, 기금 규모 문제 제기 용역 계약 해지 통보·불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공청회가 또다시 파행을 맞게 됐다. 나주시가 기금 규모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용역 수행 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재단설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산업연구원은 기금 조성 규모,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를 내놓고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전남도·나주시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연구원은 기금 규모는 81억원으로 하고 기금은 혁신도시 발전과 성과 확산에 쓰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기금 관리는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금위원회(가칭)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소재한 나주시가 이날 일방적으로 불참, 광주시와 전남도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는 당초 지난 7월 30일 열리기로 했지만, 기금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나주시가 불참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이후 광주시 주도로 공청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 용역 수행 기간인 이날 말까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0일 비공개 사전보고회에서도 세 지자체가 참석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다.

돌연 나주시가 불참하면서 공청회 개최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주시는 기금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고 용역 계약 해지 통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오는 29일 나주시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나주시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관계자는 “이견이 있으면 공청회에 일단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협의해야 하는데 아예 나오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며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주시와 협의해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세 지자체는 발전기금 조성 과 재단 설립에 합의했지만, 출연금 조성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전남도와 나주시가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세 지자체는 협약을 맺고 발전기금 조성 과 재단 설립을 위해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용역을 의뢰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을 때릴 때
-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조사를 합니다.
-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실려, 거주, 사법 복지)
-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어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장어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하주아,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용산터널 명칭변경 주장도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은 최근 열린 제3차 본회의 구성 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남구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남구 소재 소상공인 1,493명이 폐업한 상태이다”며 정책 7가지를 제안했다.

하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수수료 없는 ‘공공배달 앱’ 개발, ‘제로페이 사업’ 활

성화, 남구 구보 등에 ‘소상공인 홍보페이지 신설사업’,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코로나19 안심 전화비용’ 지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사업’ 이자율 및 보증수수료 재조정 등과 같은 지원사업 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개설’이다.

이어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로 들어오는 ‘용산터널’을 ‘봉선터널’로 변경하고 관내 터널들에 대한 명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했다.

하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에서 봉선지구 진입로 관문에 ‘용산터널’이 있다. 봉선동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터널인데도 용산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칭은 ‘용산터널’이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터널명칭이 잘못 지정된 것 같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타 지역 주민들도 도로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을 통해 방문 시 혼동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재민 기자

전남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남도는 임신부·어린이 및 어르신 57만 명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령별 접종 일정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8세는 현재 접종 진행 중이고,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9-13세는 14일부터, 70-74세는 18일부터, 65-69세는 21일부터 차례로 진행된다. 시·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며,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관 방문 시 무료 접종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길용현 기자

임영수 전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선거구 벗어난 의정보고서 배포

전남선관위가 임영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15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임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도의원 선거구를 벗어나 보성 전 지역에 배포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 모임의 식사비를 대납해 기부행위 혐의도 포함됐다. 내년 보성군수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 임 의원은 최근 전남도 선관위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임 의원은 “저의 의정보고서가 지역구 밖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나 제가한 것이 아니고 지원자들이 일부 전달한 것”이라며 “식사비도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정근산 기자